

2018. 5. 9. [수] 언론보도



2018-05-08 18:12

[수도권] 경기도, 'DMZ청 신설' 조만간 정부에 건의

[이영춘 기자]

동영상 뉴스

<앵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에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이른바 "DMZ 관리청"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DMZ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한 공간이 아닌 데다, 환경과 국토,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북한과도 협력해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에도 정부에 기구 신설을 건의한 적이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또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다가 중단한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원/서울시 신월동 : 아름답잖아요. 오염도 안됐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 잘 보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6년 당시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규제에 일부 주민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경기도는 오는 9월 국제포럼을 여는 등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춘 기자(choon@sbs.co.kr)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DMZ 전담 관리할 'DMZ청' 신설 필요하다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DMZ를 전담 관리하는 'DMZ관리청'(가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MZ청' 신설은 경기도가 2016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경기도는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감에 따라 다시 DMZ청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청에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추진단에서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DMZ청' 신설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DMZ는 경기도나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공간이 아니고 환경과 국토관리, 국방 등 여러 분야가 관련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북한과 긴밀한 협력도 필요해 정부 차원의 관리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

DMZ는 6·25 전쟁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에 만들어졌다. DMZ는 경기도 과주 정동리에서 강원도 고성 명호리까지 248km가량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방 각 2km 이내 구역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완충 지역을 의미한다.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DMZ는 역

사적 상징성이 크다.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 오래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사의 생생한 현장이다. 전쟁의 비극은 생태계를 고스란히 보전케 했다. 수십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멸종 위기종 등 각종 동·식물 2천930여 종이 서식, 분포하고 있다.

과거 전쟁의 흔적과 때문지 않은 생태계 등이 DMZ를 보배로운 곳으로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과 함께 DMZ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자체나 정부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안보, 생태, 관광, 경제의 거점육성지로 키운다는 개발 전략들을 내놓은 바 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도 구상됐다.

하지만 경기도 따로, 강원도 따로 식의 개발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따로 따로 안 된다. DMZ는 지엽적으로 개발, 관리, 보전할 대상이 아니다. DMZ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나 각 부처가 제시하는 개발안의 중복된 부분을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통일 한국을 대비하며 큰 그림을 그리려면 'DMZ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DMZ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야 한다.